

는 과거 제정 러시아 시기부터 소련 시기까지 러시아의 지배력이 집중되었던 곳이며 소련 해체 후 힘의 공백상태에서 잠시 영향력을 상실하기는 하였지만, 현재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역내 송유관 체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러시아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주요 거점지역이다.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력들에게도 카프카스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더불어 유라시아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교두보인 동시에 에너지 자원의 공급지 및 파이프라인의 경유지로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서방세계는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배타적인 영향력을 방지하고, 카스피해 및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기 위한 요충지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0세기 소련에 편입된 이 지역의 다양한 중소 국가들은 1991년 소련 해체에 주권국가로 독립하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었고, 대외적으로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관계에 휘둘리면서 아직도 제대로 된 주권국가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그루지야는 19세기 러시아 제국에 병합된 이후, 그 내부의 다양한 민족공동체들에 대한 제정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강제이주정책이 진행되면서 민족, 종족, 종교 간의 무수한 갈등의 역사를 끌어안게 되었다. 1921년 그루지야와 인근 자치주들이 모두 소비에트화 됨에 따라 압하지야 공화국을 비롯한 자치 국가들은 잠시나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31년 그루지야 출신 스탈린의 집권 이후, 과거 그루지야 영토에 포함되어 있던 자치주들이 일방적으로 그루지야로 합병되었고, 1950년대까지 강제적인 그루지야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남오세티야, 압하스 민족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 및 탄압이 자행되고,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과 민족적 특성 무시되고, 이 지역에 대한 그루지야인들의 대량이주 정책이 펼쳐졌다. 이는 소련 민족정책 전반의 문

제였는데 소련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민족, 종교적 갈등의 문제가 범이슬람 또는 범터키계의 광범위한 동일성의 연대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소수 민족이나 혹은 부족규모의 민족 집단에게도 독립적인 민족의 지위를 부여하여 행정단위를 세분화하였다. 가령 카바르지노-발카르 지역과 카라차이 지역의 경우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에게 아랍어를 금지하고, 인종과 언어가 주변지역과 다른 카프카스 남부지역의 일부를 아제르바이잔으로 통합하여 아제르바이잔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도록 하였다. 특히 스탈린 집권시절 강행된 인종 강제추방 조치에 의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의 많은 민족들이 역사적인 거주지역으로부터 강제추방을 당했고 스탈린은 강제추방이 자행된 지역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들을 국유화하고 그곳으로 새로운 민족들을 이주시켜 인위적인 자치 국가를 만들었다. 나고르노-카바르흐의 경우도 소련에 편입될 당시 역사적으로 구분되었던 종교와 민족과는 상관없이 행정구역이 정해진 대표적 사례다. 이러한 강제조치들은 다민족 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핵심기반인 인구 구성비의 인위적인 변동을 발생시켰고, 따라서 거주 민족은 한순간에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강력한 민족 분리주의를 생성시켰고 유혈충돌을 무릅쓴 민족 분리, 독립운동을 촉발하게 된다.

20세기 말 냉전이 종식되고 소련이 해체되면서 카프카스 지역은 ‘힘의 진공상태’ 속에 패권 장악을 위한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 게임판’이 되었다. 따라서 그루지아와 같은 신생독립국은 새로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국가발전전략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그루지아의 선택은 미국 및 서방세계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루지아는 내부의 수많은 민족 갈등을 봉합한 채 ‘탈러시아 친서방 정책’을 구사하는 친미국가

가 되었다. 2003년 11월 ‘장미혁명’을 통해 집권한 친미 성향의 사카쉬빌리 대통령은 ‘그루지아의 완전한 통합정책’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면서 자국내 3개의 자치 공화국에 대한 적대정책을 감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이들로 하여금 ‘탈 그루지야 독립선언’ 및 ‘러시아로의 병합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이러한 분리 독립 운동의 흐름에는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할 수 없는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다.

무엇이 폭력을 부르는가

카프카스 지역의 불안정한 정치경제적 권력 관계 속에서 그루지아의 국가통합 정책은 독립 국가의 존립을 위한 주요 과업이다. 그러나 그루지야 정부정책과 3개의 자치공화국의 분리 독립운동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지역 패권 경쟁은 그루지아의 국가 통합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루지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미국과 서방의 자본의 이해에 따라 그루지야 정부는 러시아의 지역패권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내외부의 민족 갈등을 진압해야한다는 강박을 버릴 수 없다. 또한 러시아의 관광, 무역업에 깊숙이 의존하고 있는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운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남오세티야, 압하지야와 같은 자치공화국은 유형 충돌과 전쟁을 불사하고서라도 그루지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러시아로 귀속되고자 한다. 반면에 그루지야는 무력충돌 및 경제봉쇄와 같은 강경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카프카스 지역에 인위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을 타고 일시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수많은 갈등요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위기를 더해가고 있다. 체첸 분쟁을 비롯하여 아르메니아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 영토 안에 있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서의 인종갈등, 그리고 압하지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 북카프카스 지역의 압하스 민족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 또한 남오세티아와의 통합을 목표로 러시아와 공조하는 북오세티야 독립운동의 흐름 등 “언어와 민족의 전시장”인 카프카스에서 폭발하게 될 분쟁요인은 무수히 많다.

만일 그루지야 정부가 남오세티야 자치 공화국의 분리를 용인하게 된다면, 이는 필경 친 러시아 성향의 아자리아와 압하지야를 자극하여 그루지야는 사실상 분리주의의 도미노 현상으로 국가붕괴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는 순식간에 그루지야를 넘어 카프카스 전 지역의 민족, 인종의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할 것이다. 따라서 그루지야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통합성 유지’의 목표를 버릴 수 없다. 반면 러시아는 체첸의 분리 독립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루지야 자치 공화국들에 대해 불분명한 정치적 입장과 모순된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장 거대한 위협

인종, 종족전쟁의 화약고와도 같은 카프카스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냉전 시기에는 미-소 진영 간의 팽팽한 이데올로기 대결로 인해 사회, 문화적 갈등이 봉합되었다. 반면에 탈냉전과 소련 해체 이후 중앙 정부 및 국가의 행정력이 약화되고, 중앙차원의 자원분배 및 경제지원이 감소

하면서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내재되어 있는 갈등요인이 폭발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늘날 카리브해 연안과 카프카스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경쟁이 심해져 역내 갈등을 부추기고 더욱 큰 군사적 대결과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정 러시아와 소련의 강압적 민족분리, 통합정책의 비극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하에서 '정상 국가'의 존립과 민족공동체의 생존을 목표로 하는 치열한 경쟁이 인종적, 종교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

만성적인 경제적 빈곤과 정치적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는 카프카스 지역의 대다수 민족국가 및 공동체들은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이 지역을 지배하는 강대국의 이해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경제 재건과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명분삼아 강대국 간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가장 거대한 위협은 오늘날 이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군사적 대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유럽을 향하는 송유관이 교차하는 남부 카프카스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위한 사활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패권 경쟁이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극심한 민족분쟁의 불씨가 세계 최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에 의해 점화된다면 서로 반목하고 있는 민족들의 증오와 분노는 돌이킬 수 없이 증폭될 수 있다.


카프카스 민족들을 위한 길

교전 6일 동안 남오세티야와 그루지야에서 민간인 2,100명이 죽고 3만 명의 난

민이 발생하였다. 카프카스 지역의 역사적 상흔의 대가와 강대국들의 지역패권을 향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인민에 대한 공격을 낳을 것이다. 이로 인해 민족적 반감과 증오는 한층 더 심해질 것이고 이를 또 다시 활용하는 ‘동일성의 정치’는 극단적 폭력의 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언어와 민족, 그리고 종교의 다양성이 반드시 중앙정부와 혹은 주변지역 및 국가와의 갈등을 빚어내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러한 다양한 동일성들이 한 지역에 공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 벌어지는 세계화의 폭력적 통치방식에 있다. 따라서 언어와 인종,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민족분리, 독립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종청소와 학살이라는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없다.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민족, 종족, 종교의 배타적 동일성 때문에 벌어지는 ‘새로운 전쟁’이 ‘전쟁’과 ‘적의 대상’을 무한히 넓혀가고 있는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조우할 때, 그 야만과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날 세계화가 주창하는 선별적인 포섭과 배제의 논리, 그리고 ‘무한 전쟁’의 악순환 속에 수많은 인민들이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카프카스 민족들을 위한 유일한 길은 협소한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서 벗어나 국경을 초월하는 연대를 도모하는 것, 그리고 오랜 역사적 갈등을 분리주의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의 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위기의 대안은 존재하는가?

구준모 | 정책위원

이명박의 ‘저탄소 녹색성장’

올해도 어김없는 폭염이 여름밤낮을 괴롭혔다. 폭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는 여름이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주목을 받는다. 2002년 이후 꾸준히 인상되어온 원유가격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150달러를 위협하던 원유가격이 최근 많이 하락했지만 110~120달러대인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도 올해 초보다 20~30달러 이상 상승한 가격이다. 그런데 변변한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은 석유 수입량 세계 4위, 석유 소비량 세계 6위다. 또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세계 9위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러한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발전의 비전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세부과제로 ①재생에너지 산업 등 녹색기술을 통한 일자리 창출, ②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③그린카 세계 4위 국가도

약을 제시했다. 불도저라 불리는 저돌적 개발주의자가 왜 환경 타령일까?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청계천에 이어 또 한 번 ‘환경영웅’이 되고 싶은 것일까?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7년 10월 청계천 개발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을 환경영웅 중 한명으로 꼽았다. 앨 고어 전 미국부통령,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 등도 환경영웅에 선정됐다.)

8월 15일 연설은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했다. 하지만 이명박의 녹색성장은 ‘녹색분칠’(greenwash)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녹색분칠은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한 위선적인 선전 활동을 말한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말 자체가 정부 내에서 숙고되고 계획되지 않은 채 대통령의 연설문에 삽입되었다. 그 덕분에 언론의 주목을 받기는 했으나 실제 정부 부처 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3월 환경부의 업무계획에 제시된 보수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지나치다며 폐기시켰다. 또 5월에는 상수원 보호지역을 대폭 축소하고 규제를 완화했다. 그런데 갑자기 저탄소를 외치니 윗사람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는 관료사회가 그 진의를 파악하느라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나.

또 이명박 정부는 얼마 전까지 한반도 대운하를 친환경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행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 주장하고, 그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주택사업, 자동차 산업을 꼽은 것도 의심스럽다. ‘신성장 동력’이라는 이명박의 말처럼 저탄소 녹색성장도 저돌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위한 하나의 아이টে็ม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위선은 앞으로 살펴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에너지 위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에너지 위기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점검해보자. 철마다 체감하는 이상기온과 이상기후 현상. 나날이 오르는 기름 값. 이명박마저 주목하게 만드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경고들.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일들 하나하나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모순에 주목하는 좌파라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를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밀접하게 연관된 두 문제는 여타의 환경문제와 다른 특징이 있다. 오존층 파괴나 지역생태계의 파괴와 같은 환경문제는 정책 변화나 기술적인 조정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실제로 프레온 가스로 인한 오존층 파괴의 심각성을 인정한 국제사회는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를 채택하고 1989년 발효시켰다. 이 조치는 실효성을 거두어 프레온 가스 사용을 금지시켰고, 현재의 추세라면 60년 이내에 오존층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한국의 환경운동에게는 뼈아픈 실패의 사례이지만 새만금 간척, 천성산 터널과 같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역생태계 파괴도 운동의 활성화나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국제사회의 협력이나 일국 정부의 정책 변화로 해결하기 어렵다.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 가스는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체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은 단지 프레온 가스 생산을 막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원인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가 어렵고, 기술적인 조정의 효과도 미미하다.

자본주의 역사는 인력, 축력, 나무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의 발견과 응용의 역사였다. 19세기 영국 자본주의 성립이 나무에서 석탄으로의 전환과 결부되어 있고, 20세기 미국 자본주의의 역사를 석유와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의 이면이 200여 년 간 화석연료의 연소로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다. 또 유한한 화석연료의 과잉채굴로 자원고갈이 임박했고, 자원 확보 과정에서 지정학적인 긴장과 분쟁이 심화되어 에너지 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자본주의 역사와 그 모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책도 체제의 변혁과 떨어뜨려 사고할 수 없다.

한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세계 에너지 체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결부되어 있지만 지역적 조건과 자본주의 발전의 상이함으로 인해 지역별, 국가별 편차가 크다. 그러면 한국 에너지 체제의 특징은 무엇인가? 2007년 한국은 에너지 소비 규모 세계 9위로 전 세계 에너지의 2.1%를 사용했다. 전체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세계 2위), 석유(세계 4위), 천연가스(세계 8위) 수입에 있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에너지원별로 보자면 1차 에너지 소비 중 석유가 4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이하 에너지원별 비중은 2005년 통계). 석탄 24.0%, 원자력 16.1%, 천연가스 13.3%, 신재생에너지 1.7%, 수력 0.6% 순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대수력을 합친다고 해도 2.3% 밖에 안 되고, 대수력을 제외하면 겨우 1.2%다. (정부는 시설용량 10,000kW 이하의 수력발전인 소수력만 신재생에너지로 규정하다가 2004년 말 법을 개정하여 대수력도 신재생에너지

로 분류하고 통계에 포함하고 있다.) 그나마도 폐기물 소각열이 신재생에너지의 91.3%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의미의 재생에너지는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의 1차 에너지 소비는 1981년에 4,670만TOE에서 2006년 2억3,340만 TOE로 5.0배 증가했다. (TOE, 즉 석유환산톤(ton of oil equivalent)은 각 에너지원의 열량을 석유 1톤의 열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석유 1톤의 열량은 1,000만 Kcal다.) 그 사이 GDP는 5.2배 늘어났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18TOE에서 2005년 4.73TOE로 4배 증가했다. 한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OECD평균 4.74TOE에 육박하는데, 세계평균에 비해서는 2.5배 높다. 1인당 GDP가 OECD 평균의 76.7% 정도인 것에 비교한다면 GDP 규모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많다. 한국은 이미 1인당 석유 소비가 세계 5위이고, 2006년 기준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가 4.482TOE로 캐나다(8.214TOE)와 미국(7.740TOE)보다 낮지만 일본(4.129TOE), 영국(3.818TOE), 독일(4.232TOE)보다 높았다.

한편 부가가치 1,000달러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투입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는 2005년 0.357TOE/1,00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 평균 0.195와 격차가 크다. 일본의 0.106과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난 것인데, 한국경제가 에너지 효율성의 측면에서 지극히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 소비 부문에서는 2006년 현재 산업 부문이 최종 에너지의 56.0%를 소비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수송 부문이 21.0%, 가정 및 상업 부문이 20.8%로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구 에너지 절약 중심의 캠페인과 전기요금체계는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 큰 효과를 얻기 어렵다. 최종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석유가 56.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이 16.7%를 차지한 전력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석유화학산업의 비중이 높아 비에너지용으로 쓰이는 석유 비중이 상당하다. 최종 에너지의 22.6%가 석유화학산업을 비롯해서 다양한 산업에 비에너지용으로 쓰이고 있다. 최종 에너지 소비 부문별로 에너지원 소비를 보면, 산업 부문은 2006년 석유의 52.5%, 전력의 50.7%를 소비했다. 2005년 현재 최종 에너지의 16.7%를 차지하는 전력은 화력발전으로 57.5%가, 원자력발전으로 40.3%가 생산된다. 원자력발전소는 2008년 현재 20기가 가동 중이고, 4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계획 중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추진 배경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에너지기본계획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간의 사정을 파악해야 한다. 2002년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은 에너지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에너지위원회 설립을 요구했다. 이를 둘러싼 국회나 정부 부처 간, 시민사회 간의 다양한 충돌을 거쳐 2006년 3월 진통 끝에 정부의 안을 토대로 하는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발효되었다. 에너지기본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이 수십 개에 이르는 개별 에너지 법안들이 난립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계획도 부재했다. 1997년에 1차(1997~2006), 2002년에 2차(2002~2011)로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러한 이유로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국가에너지 전반에 걸친 계획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데도 계획기간이 10년으로 짧았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새로 제정된 에너지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20년 단위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2006년 말

출범한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으며 에너지기본계획을 논의하지 못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대통령이 위원장이고 국무총리, 주요 관계부처 장관, 민간에서 위촉된 위원까지 포괄하는 회의로 그 위상이 막대하다. 하지만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독립사무국의 설치를 거부하고, 주요 실무를 산자부(현재는 지식경제부)가 담당하게 되면서 현재의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보다는 에너지 확보의 당위성만 주장하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혼란 가운데 노무현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채 2007년 12월 공청회만 한차례 진행했다. 마침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이양과 부처 통폐합이 겹쳐서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8년 6월 갑자기 에너지기본법에 명시되어있는 절차도 거치지 않고 에너지경제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의 형식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에너지기본법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은 국가에너지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내용을 검토,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관련 전문위원회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공청회를 진행한 것이다. 따라서 환경시민단체는 일방적인 계획 수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8월말로 시한을 정한 채 일을 추진해 결국 8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정부의 안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문제점 1

에너지 위기 시대에 에너지 소비를 더 늘리겠다?